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가. 제 출 자: 서울특별시
- 나. 의안번호: 제2641호
- 다. 제출일자: 2025. 3. 31.
- 라. 회부일자: 2025. 4. 2.

2. 제 안 사 유

-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진동, 분진 등의 피해로부터 시민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중이나, 평가 기간이 장기화 되면서 사업자에게 불편을 초래함.

이에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평가서 본안 심사 면제 대상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대상 사업에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모호한 규정을 삭제하여 면제 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개선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 가.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면제 요건 규정을 일부 삭제하여 협의절차 단축(안 제27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환경영향평가법」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5. 2. 13. ~ 3. 5.)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심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면제 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평가 절차를 개선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안 제27조는 현행 조례 제27조제1항¹⁾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로 일원화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면제 적용 대상을 연면적 합계 20만^m² 이하 건축물 또는 18만^m² 이하 정비사업에서 모든 대상으로 확대²⁾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이견 없음.

특히, 협의절차 면제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접수시 심의기준을 준수한 사업에 대해 본안 심의를 생략해 주는 것으로 협의기간이 기존 48일(초안 20일 + 본안 28일)에서 절반 이하인 20일(초안)로 단축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 다만, 현행 조례에 따라서도 협의절차 면제가 가능하지만, 2008년 이후 면제 사업은 10건에 불과하고 2024년 경우를 보더라도 면제 신청 6개 사업 중 2개 사업만 면제가 이루어진 만큼 단순 조례 개정을 통해 면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보다 많은 사업자가 심의기준을 충족하여 ‘협의절차 면제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1) 제27조(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 ① 시장은 대상사업 중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협의 또는 재협의 대상사업의 규모가 별표 1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인 사업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사업 → <삭 제>
2. 대상사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저감대책이 충분히 세워진 경우 → <삭 제>
3. 제29조제2항에 따른 심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 협의절차 면제 적용 대상이 약 1.7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